

광주 50대 여성 사채업자 수백억 사기극 '파문'

건설사 대표·의사·교수 등 지역 유력 인사들 돈 가로챘 뒤 잠적 피해액 300억 추정...경찰, 신고 2달돼도 소재 파악조차 못해 사채업자이자 건설업자 C씨 30억 빌려줬다 떼였다는 소문도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지역 건설업계 대표들과 의사, 유력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 뒤 잠적,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십억원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50대 여성 사채업자에 대한 소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오르내리는데도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서기는 커녕, '접수된 사건

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사채업자 A씨에게 거액을 사기당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지역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등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알선업자이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큰 손'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광산지역 모 아파트 건

설 과정에서 절반 가까운 자금을 A씨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을 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탓에 지역 경제인, 의사, 대학교수 등이 인맥 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자 사업을 논의하거나 관심을 보였다. A씨는 피해자들을 설명한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도 이렇게 알게 된 A씨에게 8억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지난 2월, 직접 찾아와 "60억원을 빌려주고 8억을 이자로 받았는데, (내가) 30억원을 받아갔다고 (경찰에) 신고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2시간만 빌려달라고 해 수표로 8억원을 끌어 모으는 등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알선업자이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큰 손'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광산지역 모 아파트 건

들도 잇따르고 있다. B씨 외에도 2건의 피해 사실이 이미 신고·접수된 상태로, 경찰은 이들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A씨가 사채업, 투자·알선업자라는 직업을 활용해 아파트·오피스텔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씩을 끌어 모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A씨가 자신의 경력 과이러바 '지역 자산가'들과 맺은 인맥 등을 활용, 다양한 투자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들어 고소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괜히 알려지면 조그만 지역 사회에서 경력에 흠집이 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피해자들과 규모까지 거론하며 전체 피해 규모

가 3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근거(?)를 갖춘 추정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이자 건설업자인 C씨인 경우 고리로 A씨에게 30억원을 빌려줬다가 떼인 것으로 소문이 파다하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떼인 뒤 경찰측에 빨리 잡아달라고 호소하는 건설업자 D씨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구체적 피해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만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 외에 A씨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2개월 가까이 별다른 진척이 없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차명 부동산 매입 혐의 손혜원 전 의원 4년 구형

목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의 목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표 재생사업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거래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들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분양 대행사 중복분양으로 수십억 사기

광주 60여명 54억원 피해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사가 중복 계약으로 수십억원대 계약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 파문이 일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데다,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수법에 당한 피해도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동구 지산주택조합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자 27명이 분양대행사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소장을 접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9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27명이지만, 이들이 입은 피해액만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업무 대행사 측이 부적격 조합원 물량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1호당 3~4명에게 중복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지산주택조합은 광주시 동구 지산동 317-419번지 일대 부지(연면적 6만720㎡)에 454세대가 들어서는 16~25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을 짓겠다고 인가를 받은 뒤, 지난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한양건설을 시공사로 정해 착공을 준비해왔다.

업무 대행사 측은 이 과정에서 454세대 중 51명이 세대주 변경·타 주택 구매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이들을 대신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부적

격 조합원이 나가면 그 자리를 대체해준다"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9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은 부적격자를 대체할 새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의 부적격 내용을 해소해 다시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을 모른 피해자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자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대행사측 말에 속아 거액을 지급했다. 업무 대행사 측은 또 시세보다 저렴한 조합원 조건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며, 피어 계약금을 가로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중도금 납입 일자에 맞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가짜 분양' 사기 사건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업무대행사 측은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대행사 직원 개인 계좌로 받아 잠적한 상태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은 한 가구당 많게는 4명까지 중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대행사 대표가 주택조합의 초기 추진위원장이었다는 점도 피해를 키웠다. 일부 피해자들은 추진위원회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는 54억원으로 피해자들도 6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업무대행사 관계자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조합원들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 6·10항쟁 기념식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 앞 6월 항쟁 표식비 전다마당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1987합창단의 식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철거 공사 백운교차로 신호체계 변경

경찰이 백운고가 철거 공사로 인한 교통량이 몰릴 것을 우려, 신호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백운고가 철거에 따라 인근 교차로와 제2순환로 나들목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신호 주기를 변경하고 연동 교통 체계를 재구축하기로 했다 10일 밝혔다.

백운고가 교통통제 직후 교통량은 48% (기존 1일 15만1633대 → 7만7592대) 감

소했지만 백운교차로의 감소한 교통량이 우회로를 이용하면서 주변 교차로 및 제2순환로 나들목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우회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2순환도로 효덕IC(제2순환로→서문대로 방면), 용산IC(용산IC→용대로 방면), 두암IC(제2순환로→갈마로 방면), 학운IC(제2순환로→외재로 방면) 등 4개 소·출입로 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또 백운교차로, 회재로, 대남대로 등 14개 교차로 신호주기도 변경하고 주변 도로 교차로의 연동체계를 재구축해 한 번의 신호 주기에 많은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좁은 우회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신호 운영 방안을 재수립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우회전 차량에 치여 위독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의 한 교차로에서 A(여·56)씨가 운전한 쏘렌토 차량이 초등학생 B(11)양을 치었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내고, 인근 마트로 돌진해 현관문을 파손하고 멈춰섰다.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경찰은 CCTV 등을 감시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